

Online Series

2015. 11. 2. | CO 15-29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 조야의 반응과 향후 과제

서동구(국제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지난 10월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담 이래 네 번째 회담이었다. 이번 회담은 사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미국의 양해 하에 10월로 연기된 것이었다. 금번 방미 시기는 지난 9월 초 국제적 관심을 끌었던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9월 말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 조야의 주요 반응¹⁾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대북 메시지

양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경고하면서도 비핵화 의지표명 시 지원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최근 이란과의 핵협상이 추진되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국제안보에

1) 필자가 10월 19~23일간 워싱턴과 뉴욕에서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과 접촉하여 직접 청취한 견해를 종합한 것이다.

최대 위협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박 대통령이 국방성을 직접 방문하여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한 것은 북한에 대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의 신뢰를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협했으나 일단 ‘노출된 허세(called-bluff)’로 드러났다. 이는 9월 말 개최된 미중 정상 회담에서의 시진핑 주석의 경고성 발언과 함께 10월 10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바로 이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 사실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를 거양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의 국제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이란과 쿠바의 대미 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서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어떤 외국정상과도 회담을 갖지 못하는 등 외교적 고립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고립에 처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금번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강력한 채찍과 함께 당근을 동시에 제공한 것은 김정은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데 과거와는 달리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대두되었다.

통일문제 공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문제에 대한 양국 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했는데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협의체는 양국이 고위급 관계자를 일종의 특사(special envoy)로 임명하여 별도의 채널을 구축할 수 있으나 기존의 전략대화의 하부구조로 편입될 수도 있다. 양국 간 기존의 정책채널들이 주로 현안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이라는 중장기적 이슈에 대해 별도의 채널이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문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과 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과 강한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종의 집합적 관여(collective engagement)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G2로서 훨씬 더 다양하고도 복잡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상호협력과 갈등의 혼합 게임(mixed game)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개입과 역할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이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는 전략적 자산의 성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측이 유념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집합적 관여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우선순위(priority)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평가되고 있다. 바로 이 포인트가 한국의 중국 경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 한국이 중국을 의식하여 타이밍을 놓쳤다는 견해가 있으나 반면에 TPP 자체가 아직 불확실성 (의회의 비준과정, 차기 미국 대선일정 등)이 크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다만 과학기술, 첨단산업, 국제개발, 사이버안보 등 한미 양국 간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의제를 개발한다는 New Frontier 개념은 한미 동맹의 지속강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사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표출되었다.

동북아 지역

박 대통령은 중국 경사 우려에도 불구하고 9월초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한국 외교에 있어 새로운 스텝을 취했고 곧이어 10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미 조야의 우려를 일부 완화시켰다. 또한 11월초에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예정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한국의 영향력을 선순환 시키는데 일단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확성기 및 장거리미사일 위기가 해소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는 등 동북아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협력의 모멘텀이 조심스럽게 형성되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다는 점은 분명하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관계도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강력한 대북억지력 확보는 물론 박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NAPCI)의 토양도 일부 마련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과제

상기 반응을 감안하여 향후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의 심화를 위한 계기로 작용했으나 한중 관계의 긴밀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한미 정상회담의 빈도를 높이는 동시에 의제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미 정상회담은 1952년 이래 총 60차례 개최되었으며 회담의 빈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는 있다. 다만 우리의 균형 있는 G2 외교라는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빈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제2기 임기가 1년 남짓 남아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말고 꾸준히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차기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행정부의 교체 여부와도 무관하게 초당적 태도로 한미 동맹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진지한 외교적 자세(diplomatic posture)를 통해서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 편향될 것이라는 워싱턴 일각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도발 및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G2-Korea 실무급 협의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목함지뢰사건으로 야기된 한반도 미니위기(mini-crisis)를 남북한 회담의 모멘텀 확보라는 성과로 전환하고 특히 김정은 정권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억제한 것은 바로 한중 관계 및 한미 관계의 합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및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3개국 실무급으로 구성되는 전략협의체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과 갈등의 혼합게임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사이버 해킹 문제와 해양기지건설 문제 등 심각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국제통화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는 협력을 강화시켰다. 이와 같이 북한 문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사안이 아닌 협력 사안이 되도록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상기와 같은 G2-Korea 실무급 협의체 아이디어가 그 일환이 될 수 있다.

이 협의체는 북한발(發) 국제안보현안(핵·미사일 개발, WMD 확산 등)의 임시적(ad-hoc)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북현안 해결의 경험축적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 및 평화통일 과정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메커니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한·미·일 삼각공조는 평화통일의 필요 조건이며 이와 함께 한·미·중 삼각협력은 평화통일의 충분조건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셋째, G2가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현안으로써 우리가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원칙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입장표명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국제법적 기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입장이 현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편의 입장에 거슬릴 수 있지만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명분이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최소한 G2의 글로벌 체스판(global chessboard)에 불필요한 연루를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중한 외교적 자세를 통해 동북아 지역정세의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에 있어서 G2의 공동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최근 TPP²⁾ 대(對) RCEP³⁾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각각 G2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안보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TPP가 미일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공동체(12개국)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12개국 중 일본은 물론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이 RCEP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정치(high politics)와는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우리 경제에 미치는 득실이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KINU 2015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 TPP의 경우 미 국내상황(의회 인준과정, 차기 대선 및 새로운 행정부 팀 안착)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적어도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 박 대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부산에서 제10차 공식협상을 개최하는 등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